

트럼프 주도 G7 확대 제안...문 대통령, “기꺼이 응하겠다”

“국가 위상 제고” “한중관계 악화 우려” 양날의 검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G7(주요 7개국) 확대 구상에 ‘기꺼이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선진국 그룹에 합류함으로써 한국의 외교적 위상을 확대해나간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G7 확대를 미국 주도의 반중(反中) 전선 구축에 활용하려는 의도를 내비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협력 등으로 회복 중인 한중 관계가 다시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2일 제기된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전날인 1일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에서 올해 G7 회의 초청을 수락하는 한편, 기존 G7 체제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G7이 낡은 체제로서 현재의 국제 정세를 반영하지 못한다”며 “이를 G11이나 G12 체제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G7 체제는 전 세계적 문제에 대응하고 해결책을 찾는 데 한계가 있다”며 “G7 체제의 전환에 공감하며, G7에 한국과 호주, 인도, 러시아를 초청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화답했다. 이어 브라질을 포함해 G12로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 “인구, 경제규모, 지역대표성 등을 감안할 때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G7 회의 참여 제안에 응한 것은, 코로나19 방역으로 높아진 국가 위상을 더욱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G7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등이 회원국이며 ‘선진국 클럽’이라는 상징성도 갖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G7 회의를 대중 압박 수단으로 사용할 뜻을 시사하고 있다. G7 회의의 동참이 한중관계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호주, 인도, 러시아 초청 의사를 밝히며 “중국에 대해 함께 논의하기 위해 이들 새로운 국가들을 초대하고 싶은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한국, 호주, 인도는 모두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추진 중인 ‘인도-태평양 전략

의 주요국이다. 중국과 국경을 맞대 러시아는 대중 경제 측면에선 미국과 이해관계를 일부 공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브라질을 추가로 언급한 것을 두고 브릭스(BRICS,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공) 국가 중 중국을 배제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국과 호주는 미국의 제안에 호응해 G7 확대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중국을 배제하겠다는 미국의 의도가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중국 주도의 상하이협력기구 회원국인 러시아와 인도가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한편 미국의 ‘원 가르기’ 압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G7 회의 참여 제안에 응한 것은 잘한 결정이라고 평가하며 대중

외교에 있어서도 이를 기회로 살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신 센터장은 “우리에게 주어진 외교적 선택지가 다양할수록 중국을 설득할 수 있는 레버리지도 있다”며 “G12 안에 한국이 들어간다는 건 한국이 그만큼 위상이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과 경제 연계가 높은 국가는 한국뿐이 아니고, G7 확대회의에서 미국 뜻대로 반중 노선이 형성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그 안에서 나름의 행보를 하면 된다”며 “한국이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존중한다는 메시지를 발신하는 외교적 행보를 이어간다면 G12 가입이 한중 관계 악화 요인이 될 수는 없다”라고 제안했다.

김윤호 기자

정부, 日 WTO 제소 재개

외교부 “지소미아 종료 신중히 검토”

외교부가 지소미아(GSOMIA·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유예와 관련해 “수출 규제 논의 동향에 따라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지소미아 종료 재검토 여부에 대한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해 11월 22일 지소미아의 효력을 언제든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우리가 협정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 상황”이라며 “수출규제 조치 철회는 이뤄져야 하는 것이고, 계속 촉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지난해 중단했던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다시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당국 간 협의까지 중단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당국자는 “수출 당국 간 국장급 대화를 지속하겠다는 의사가 있다”고 우리 정부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 역시 “외교 당국간 협의를 통해서도 수출 규제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 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근석 전남도의원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초청 특별강연

‘전라남도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 조례의 이해’ 주제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한근석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28일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주관으로 목포아동원에서 ‘전라남도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 조례의 이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이날 강연은 보호아동의 자립을 돕는 도내 자립지원 전담요원* 30여명을 대상으로 보호대상 아동의 자립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한근석 의원은 강연에서 “도내 아동생활시설 56개소에 총 1,200명 정도가 입소해 생활하고 있는데, 만 18세 이상이나 대학졸업 후 보호연장이 종료되어 시설을 떠나는 아동이 매년 200여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의 사회진입 초기에 안정적인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전라남도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 조례’를 올 3월에 대표 발의하여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와 전남도에서는 퇴소아동 등에게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디딤씨앗통장, 주거지원서비스 등의 자립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퇴소 시에 지원제도를 몰라 지원을 못 받거나 지원받은 지원금 활용에 미숙해 사회진입 초기부터 경제적 어려움으로 취약계층으로 내몰리는 현실에 직면하는 퇴소 아동이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한 의원은 “전라남도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 조례에 퇴소아동 등의 자립과 자활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을 의무화하고, 각종 재정지원 이외에도 인성교육지원, 건강프로그램 지원, 정서적·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지원 사업을 통해 퇴소아동 등의 사회적응을 용이하게 하

여 건강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조례내용을 설명했다.

특히, “현재 아동복지법상 만 18세가 되어 보호 종료된 아동은 민법상 만 19세 미만으로 성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법적 모순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퇴소한 보호 종료 아동이 민법상 성년이 될 때까지 시설의 장이 후견인을 유지하여 법적 후견인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의 개정과 아울러 민법과 아동복지법의 성년연령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보호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자립준비와 보호 종료아동의 안정적인 사회정착 업무를 담당하는 아동자립지원 전담요원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퇴소아동의 자립 저해요소를 차단하는데 도의회 차원에서라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민주, 5일 본회의 열어 의장단 선출

김태년 “국민에 책임 다하기 위해 정해진 날짜에 개원”

더불어민주당은 2일 21대 국회 첫 의원 총회를 열고 오는 5일 의장단 선출을 위한 임시국회 소집에 뜻을 모았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열린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고 6월5일 우리 몫의 의장, 부의장을 선출하겠다는 안건을 (의총에) 올렸다”며 “의원 모두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아줬다”고 전했다.


의총에서 5일 임시국회 소집과 관련한 공감대가 모아짐에 따라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사무처에 임시국회 소집요청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앞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총 후 “국민은 일하는 국회를 명령하고 있다. 국민만 바라보고 일하는 국회를 힘있게 추진해나가야 한다”며 “국민

에 책임을 다하기 위해 국회법에 정해진 날짜에 반드시 국회를 열겠다. 5일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겠다”고 정서개원 의지를 밝혔다.

이어 “일하는 국회법을 통과시켜 일하고자 하는 열정을 제도화하겠다”며 “연중 상시국회를 열어서 논의를 충분히 하되 국민에게 필요한 법과 예산은 신속하게 제공하고 처리하겠다”고 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주요영 마태통합당 원내대표가 민주당을 향해 “인해전술”이라고 발언한 것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6·25 전쟁 당시 중공군이 개입해 우리 군이 철수한 것을 두고 나온 말이 인해전술인데 이 용어를 쓰는 것은 통합당의 역사의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 062) 971-7400

광고 직통 224-5800

팩 스 222-5547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